

KEF 경총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경제현안 전망과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2022. 4.

< 조사개요 >

※ 「경제현안 전망과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주)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2년 3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조사를 진행한 결과임.

KEF 한국경영자총협회

1

글로벌 공급망은 '일시적 위축은 있으나 향후 이전 수준 회복' 전망 35.5%, '진영에 따른 공급망 구축 강화 전망도 34.0%로 비슷하게 나타나

- 최근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는 글로벌 공급망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주로 '일시적 위축은 있으나 일정 시간 경과 후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35.5%), '진영(미국·EU 등 자유진영 VS 중·러 등 비자유진영)에 따른 공급망 구축이 강화될 것'(34.0%)이라는 견해를 밝힘.
- 이는 현재 모습의 글로벌 공급망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견해와 진영 간 대립에 따라 새로운 모습의 글로벌 공급망이 구축될 것이라는 견해가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이 미·중 무역전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정세에 따라 향후 공급망의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음을 시사
-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이 강화돼 글로벌 공급망이 위축된다'는 응답은 11.5%에 불과('무역협정, 지역블록화 중심 공급망 구축 촉진' 응답은 18.0%).

< 표 1. 향후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한 전망 >

구분	응답률
자국 중심 공급망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 위축	11.5%
무역협정, 지역 블록화 중심 공급망 구축 촉진	18.0%
진영(ex: 미국·EU 등 자유진영 VS 중·러 등 비자유진영)에 따른 공급망 구축 강화	34.0%
일시적 위축은 있으나 일정시간 경과 후 이전 수준 회복	35.5%
기타	1.0%

2

「재정 확대 불가피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한다」 50.5%

□ 차기 정부가 국가 재정에 대해서 어떠한 운용 기준을 견지해야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5%는 '일정 부분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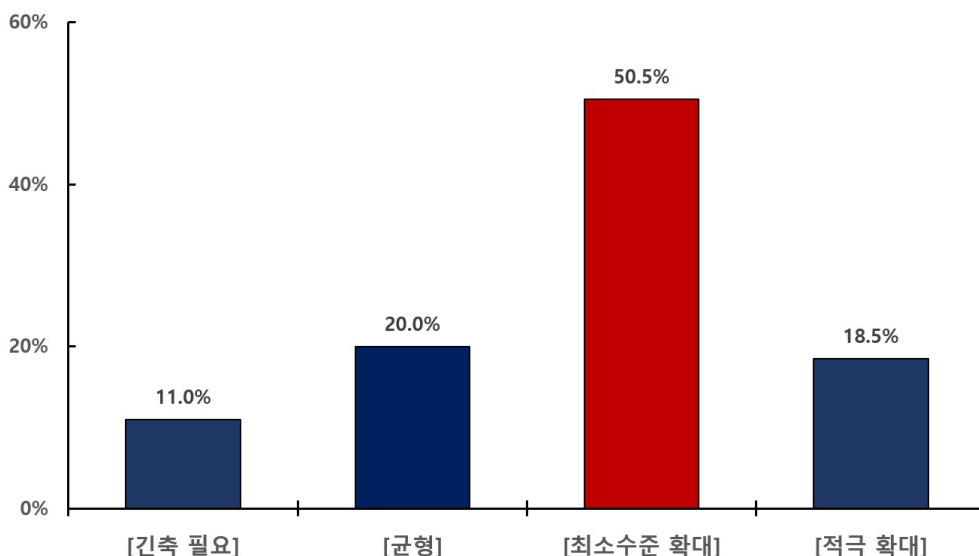
○ 이외에 '균형재정 유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0.0%이며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8.5%로 나타남.

※ 한덕수 총리 후보자, "단기적으로 재정이나 금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가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가져야 한다." (2022년 4월 4일)

< 표 2. 차기 정부 국가 재정 운용 기준 >

구분	응답률
[긴축 필요] 지금 증가추세도 감당하기 힘들어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	11.0%
[균형] 균형 재정 유지가 필요하다	20.0%
[최소수준 확대] 일정 부분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그 크기는 최소한으로 해야한다	50.5%
[적극 확대]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18.5%

< 그림 1. 차기 정부 국가 재정 운용 기준 >



- 응답자들이 전망한 2022년 우리 경제성장을 전망치 평균은 2.7%로 나타남.
- 이는 정부(3.1%) 한국은행(3.0%), IMF(3.0%) 등 국내외 주요기관들의 전망치보다 0.3~0.4%p 낮은 수준으로, 전문가들이 최근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과 같은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보수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풀이됨.
 - 응답자의 93.0%는 202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0% 이하 수준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을 2.5% 이하로 전망한 응답도 29.5%에 달했음.
 - '2.5% 초과 ~ 3.0% 이하'로 전망한 비율이 63.5%로 가장 높았으며, '2.0% 초과 ~ 2.5% 이하'는 18.5%, '2.0% 이하'는 11.0% 순으로 집계 되었으며 3.0% 초과로 전망한 응답자는 7.0%에 불과

< 표 3.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구간별) >

구분	2.0%이하	2.0%초과 ~ 2.5%이하	2.5%초과 ~ 3.0%이하	3.0% 초과
응답률	11.0%	18.5%	63.5%	7.0%

< 참고 > 국내외 주요기관 2022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기관	정부 ('21.12.20)	한국은행 ('22.2.24)	KDI ('21.11.11)	IMF ('22.1.25)	OECD ('21.12.1)
전망치	3.1%	3.0%	3.0%	3.0%	3.0%

주 : ()안은 전망시점

4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58.5%, 「인상」 9.0%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65.5%, 「인상」 7.5%

□ 우리나라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 응답자는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58.5%)를, 또한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65.5%)를 가장 많이 답변

○ **(법인세)** 그 외 응답으로 '現 수준 유지'는 32.5%, '세수 확보 차원에서 최고세율 인상'은 9.0%에 불과

- 이는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최고세율을 인상(22% → 25%, 중앙정부 기준, '18년)하여 기업의 조세 경쟁력이 저하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

* 주요국 법인세 최고세율(%), 중앙정부 기준,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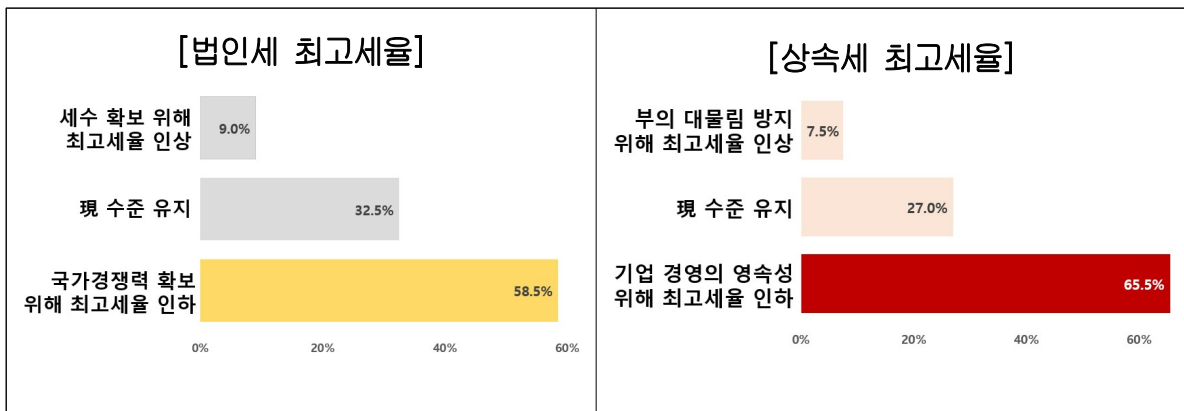
[美] 35('10)→ 21('20) [日] 30('10)→ 23.2('20) [英] 28('10)→ 19('20)

○ **(상속세)** 그 외 응답으로 '현 수준 유지'는 27.0%,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최고세율 인상'은 7.5%에 불과

- 이는 우리나라가 기업 승계 시 높은 상속세율과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

※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20%)까지 더해져 60%까지 높아짐.

< 그림 2.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의견 >



5

기업 경영환경 개선 요인 전망으로 「기업규제적 입법(시도) 축소」 기대 36.0%

- 경제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으로 '기업 규제적 입법(시도) 축소'를 36.0%로 가장 높게 답변
- 행정규제의 합리적 혁신을 기대하는 답변도 31.5%로 높았으며 합리적 조세제도 정비에 따른 조세부담 완화는 13.5%로 응답하였음. 반면에 '노사관계 안정'을 기대하는 응답은 1.0%로 매우 낮게 나타남.

< 표 4.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 >

구분	응답률
행정규제의 합리적 혁신	31.5%
기업규제적 입법(시도) 축소	36.0%
노사관계 안정	1.0%
합리적 조세제도 정비에 따른 조세부담 완화	13.5%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음	18.0%

6

차기 정부 노동 개혁 과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43.5%

□ 차기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묻는 설문에 대해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외에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구축 등 임금 유연성 확보' 41.0%, '글로벌 스탠다드(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파업시 대체근로허용 등)에 맞는 제도 개선' 33.5%,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 26.0%, '최저 임금 안정 및 합리적 제도 개선' 24.5% 順으로 조사

※ 차기 정부 대선 공약 (노동시장) :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직무가치 및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선, 최저임금제도 개편

< 표 5. 차기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개혁 과제 >

구분	응답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구축 등 임금 유연성 확보	41.0%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43.5%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	33.5%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	26.0%
최저임금 안정 및 합리적 제도 개선	24.5%
기타	2.0%

주: 2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각 항목 비중의 합이 100을 초과

7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리스크 올해(2022년) 안에 해소되기 어려워 66.5%

- 응답자의 66.5%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리스크가 올해(2022년) 안에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2022년 하반기'라는 응답과 '2023년 상반기'라는 응답이 각각 32.5%로 가장 높았으며, '2023년 하반기'는 19.0%, '2024년 이후'라는 응답은 15.0%로 조사
 -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명률 감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경제 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역시 여전히 상존해 있기 때문으로 추정

< 표 6.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리스크 해소 시점 전망 >

구분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2024년 이후	기타
응답률	32.5%	32.5%	19.0%	15.0%	1.0%

8

정부 정책 리스크 「완화」 기대 55.5%

□ 응답자의 55.5%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경제환경 리스크*가 현 정부에 비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

* 정책리스크 이외 요인(금리, 환율, 대외요인 등 일반 경제 환경) 제외

** '매우완화' 11.0% + '다소완화' 44.5%

○ 지금과 비교해 '변화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12.5%로 나타났으며, 정부 정책에 따른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응답은 32.0%로 조사

* '다소 확대' 21.0% + '매우 확대'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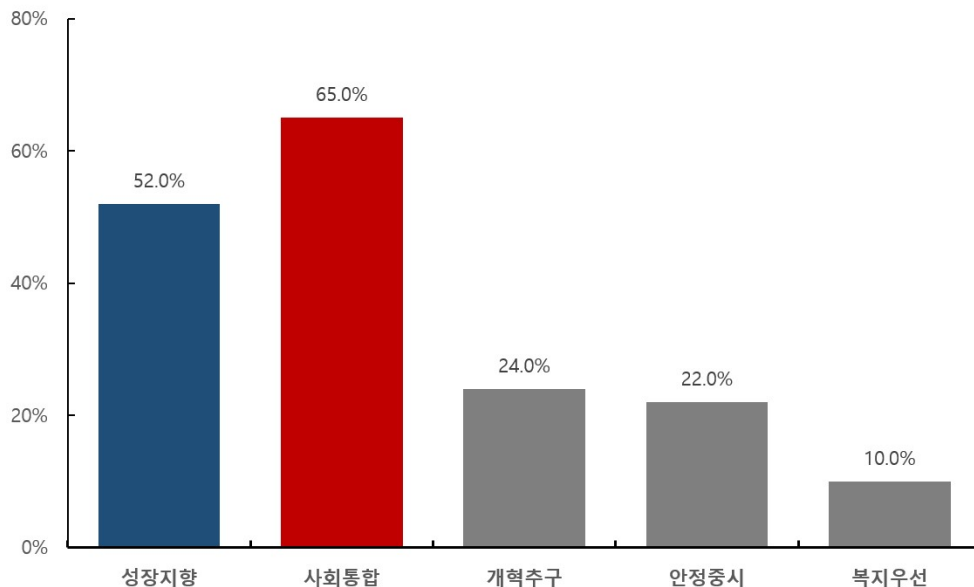
○ 이는 전문가들이 규제 혁신과 민간주도 성장을 지향하는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 이외에 '여소야대의 국회 구성', '개혁을 둘러싼 갈등' 같은 정치적, 현실적 어려움을 함께 고려했기 때문으로 추정

< 표 7. 정부 정책 리스크 전망 >

구분	전문가 응답률
매우 완화	11.0%
다소 완화	44.5%
완화	55.5%
변화 없음	12.5%
확대	32.0%
다소 확대	21.0%
매우 확대	11.0%

- 차기 대통령이 향후 5년간 국정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시해야 할 리더십에 대해 경제 전문가의 65.0%는 '지역·계층·세대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통합형 리더십'이라고 응답함.
- 그 외 응답은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성장지향형 리더십' 52.0%, '사회 혁신을 강조하는 개혁추구형 리더십' 24.0%, '균형감각을 갖춘 안정증시형 리더십' 22.0%, '복지를 중시하는 복지우선행 리더십' 10.0% 順으로 집계
- 전문가들은 민간기업의 영역인 '경제성장' 분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갈등' 분야에서 차기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하기 때문으로 추정

< 그림 3. 차기 대통령에 바라는 국정운영 리더십 >



주: 2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각 항목 비중의 합이 100을 초과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최근 경제 상황과 제20대 대통령 선거(3.9) 결과에 따른 경제 환경변화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기업경영환경 변화 대응 및 전략 수립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전국 대학 경제학과 또는 경영학과 교수 200명

2. 조사기간 및 조사 수행기관

- 조사기간 : 2022년 3월 14일 ~ 3월 28일 < 15일간 >
- 조사수행기관 : (주)글로벌리서치

3.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및 유선 조사를 병행하였음.

4. 주요 조사항목

- 2022년 경제 전망(주요 경제지표 및 공급망 변화 등) 관련 사항
- 차기 정부 재정 운용 기조 및 세율(법인세 및 상속세) 조정 방향
- 차기 정부 정책에 따른 기대 및 노동개혁 중점과제
- 차기 정부 구성에 따른 정책리스크
- 차기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 해야 할 리더십

5. 회수설문 수

구분	회수설문 수
전국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